

환경영향평가 공개 필요성 촉구...

유엔, 2030년까지 시스템 마련 권고 ... 재생에너지 비중도 확대

세계 대기업들이 영업실적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도 공개토록 하는 시스템을 2030년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유엔의 특별 고위급 패널이 권고했다.

<포스트-2015> 개발 의제를 준비하는 유엔의 고위급 패널은 5월30일(현지시간) 해당내용을 포함한 권고보고서를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 15년 동안 세계가 추구할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중요 의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정부는 재무상황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는 공개수준이 4분의1 가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총액 1억달러(1125억원) 이상의 관련기업에 대해 모범적 기준을 따르지 못하면 이유를 설명토록 하는 의무적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 사이에서도 2030년까지는 사회·환경영향 평가가 주류적 관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세계가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없이는 빈곤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위급 패널은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 27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의장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앨런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3명이 맡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31>